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정시2차 1.20~2.10
062)520-2555

光州日報

광주 -6/1℃ 목포 -3/2℃ 여수 -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단기 4344년 (음력 12월 16일)

제18883호 1판 2011년 1월 19일 수요일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동양저축은행 226-0180

대한민국은 복지전쟁 중

민주당 '3+1 무상시리즈'에 한나라 "세금폭탄" 맹공…총선·대선 겨냥 전면전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를 화두로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각각 내세우며 정면충돌하고 있고 잠재적 대권 후보들도 각기 자신만의 '복지 플랜'을 마련해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민주당은 '3+1 시리즈'(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반값 대학 등록금)로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주거 복지(전월세 상한제)와 일자리 복지(사회적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기획단'을 구성,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정책 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복지국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정의와 복지만이 서민이 행복한 나라, 중산층이 신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복지 이슈를 선점당한 한나라당도 '선택적 복지 및 지속 가능한 복지'를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외상 정책' '증세 및 세금 폭탄' 등을 집중 거론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전 정권의 '세금 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며 "허위 선심정치와 조삼모사식 정책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합리적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당내에 심재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전

대권 후보들도 각기 차별화된 복지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증세 없는'보편적 복지'를 내놓았으며, 정동영 의원은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의회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맞춤형 복지'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정세균 의원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확대한 '공동체 복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시민 전 의원은 오는 3월 국민참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체적 복지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 선점 전쟁'의 1차 분수령은 오는 4월 재보선이 될 전망이며 이는 복지 이슈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이끌며 내년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복지 이슈가 조기에 점화되면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복지 정책의 구체성과 현실성에 따라 민심의 향배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GS칼텍스 피해액만 최소 300억

여수산단 정전피해 26개업체…사고원인 책임공방 일 듯

17일 오후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 사고로 GS칼텍스의 피해액만 최소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모두 26개 업체로, 이 중 16곳은 정상 가동됐지만 GS칼텍스 등 10곳은 19~20일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수시와 여수산단 내 기업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발생했던 여수산단 정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업체는 GS칼텍스, 여천NCC, LG화학, 여수열병합발전소 등 모두 26곳으로 최종 파악됐다.

이 중 16개 업체는 이날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GS칼텍스, 삼남석유화학, LG화학 VCM공장 등 10개 업체는 시험 가동 등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들 공장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최소 1~2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공장이라는 성격상 한 곳에서 1초라도 가동 차질이 빚어질 경우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26곳 전체로 따지면 피해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날 이번 정전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3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어제 정전으로 원유 정제와 석유화학 시설이 정전으로 모두 중단됐다"며 "앞으로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20일께 중단됐던 정유·석유화학 시설이 완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GS칼텍스의 피해가 이처럼 큰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전이 발생하자 GS칼텍스에 전기를 공급하는 여수화력발전소가 과부하를 우려해 여수화력-GS칼텍스간 전용전력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20여분간 전력이 차단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 정전 시간이 순간에 불과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한전이 관리하는 부스 안에서 폭발이 있었고 목격자도 확보했다"며 "강풍과 같은 천재지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여수화력에서 GS칼텍스로 가는 전용선의 전력공급을 차단한 것은 맞지만 인위적 조작이 아닌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난 정전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4대강 취소 주민소송 모두 패소

전주지법 "영산강 살리기 적절성 인정"

법원이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4대강 사업 취소를 요구한 주민 소송이 모두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강경구)는 18일 박모(50)씨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산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과 사업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목적의 정당성과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일 한강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 낙동강, 지난 12일 금강 관련 소송 등에서 같은 취지로 각각 원고 기각 판결을 했다.

국민소송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초법, 탈법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법부는 각성하라"며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기록적 한파에 양식장 400만마리 떼죽음

최근 유례없는 한파(寒波)가 이어지면서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등 여수 앞 바다 양식장의 감성돔 400만 마리가 동사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양식장 어민들이 떼죽음 당한 감성돔을 그물로 건져내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부 '투포트' 수정…울산 포함 '스리포트'로

광양항 기능 축소 우려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이른바 '투포트(two port) 시스템'의 수정을 사실상 선언했다. 가뜩이나 대내외적 도전을 받고 있는 광양항의 활성화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1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 차례 수정됐다.

이번 수정계획은 특히 항만의 경우 국가 브랜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에 '울산항'을 추가해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 개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항구로 육성하기 위한 '투포트(양항) 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게 전남도 안팎의 해석이다.

중복된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광양항의 경우 환적 컨테이너 유치보다는 자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 및 유치에 주력하면서 오일환적, 원자재 수입의 복합 화물 허브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울산항에 대해서도 최대 석유물류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오일환적' 허브로 개발하겠다는 중복된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복합화물허브항'과 '오일환적 허브항'이라는 다른 명칭에도 불구,'오일환적'을 담당토록 한 항만 개발 구상이 겹치는데다, 정부가 현재 환황해권 물류 및 레저관광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항만 개발을 명분으로 '새만금 신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광양항을 축소하려는 '명분쌓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광양항의 주요 터미널 운영사가 물동량 부족에 따른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부두운영권(4선석)을 반납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등 물동량 창출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남도 등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확한 고시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